

90.9.2 특수강간죄 신설

집단폭행등 고소없이 처벌

특가법 개정안

법무부는 1일 최근 빈발하고 있는 집단강간 등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정기국회에 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에 특수강간죄를 신설해 흉기 기타 위협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2인 이

상이 강간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 일반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으며 형량도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돼있다.

報

1990年10月17日

水曜日

水曜日

「퇴폐이발」 고객명단 공개키로

자율방범대에 가스총 지급

市, 범죄 퇴폐행위 근절책 마련

안국동은 퇴폐이발업소를 출몰한다. 퇴폐이발업소의 명단이 공개된다.

서울시는 17일 오전 9시 고건시장주재로 일선 구청장 및 경찰서장, 연세회의를 열고 대동행의「대법정전정전」에 따른 실천계획을 마련, 이발업소의 퇴폐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내 전이발소를 대상으로 커튼 칸막이 밀신을 퇴폐조장시설을 강제철거하고 퇴폐행위가 적발될 경우 업주와 면도사를 함께 형사처벌하는 한편 이용객의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또 서울시는 앞으로 보사부와 협의를 거쳐 면도사등록제를 실시하고 박애서 이발업소 내부를 무시할수 있도록 하도록 제노점인 퇴폐행위 근절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10억원의 예산을 투입, 현재 파출소 단위로 구성돼있는 자율방범대(총 6백66개대 1만3천9백86명)에 방범대별로 각각 가스총 3정, 무전기 2대를 지급키로 했다.

에1개반, 갈매지역에 4개반, 강남지역에 3개반씩 모두 8개반을 운영키로 했다. 서울시는 경찰은 이밖에 도택시 버스의 불법운행사례가 적발될 경우 종전 과징금 10

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은행정지(10%)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주차 △노상정차를 △불법광고를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서울시가 퇴폐이발업소고객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이번 방침에 해법조각조각 회박하고 심혈을 기울여 다분한 불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초 호혜시를 규제하기 위해 호혜시를 읍을 읍인 호주의 단을 공개키로 했다. 가 사회인 물의를 빚자, 일출만 명단공개 방침을 반부했다.